

연이은 사고에 책임론 '들불'... 은행 채용비리도 도마위

옵티머스 사태 조사 미흡 지적

윤석현 원장 "검사 마무리 단계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엄정조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라임펀드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감독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와 관련해 7차례나 민원이 접수됐고, 특히 회사의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을 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고 진정을 접수했는데 왜 제대로 조사를 안했나"라며 "라임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하고도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모펀드 운용사 조사는) 모든 건에 대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서

전체 프레임을 확인하는 정도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선 이후에도 올해 2~5월에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팔았다"며 "실태점검 중에도 이렇게 팔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유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8일인데 반해 옵티머스는 두 배가 걸렸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이 사모 DLF를 팔면서 규제를 회피해 공모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지적에 "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나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50인 이상에게 무차

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 광고 문자를 2만 여건 가량 보냈다"며 "자본 시장법을 위반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채용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 은행의 채용비리 재판결과를 확인해보면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반면 부정 채용자 때문에 피해를 본 응시자들은 구제를 전혀 못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했다. 윤 원장은 관련 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정영채, 옵티머스 의혹 해명 "경영진, 지점 판매 관여 불가"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압박 부정
"PB, 활동성·고객만족도로 평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13일 "(NH투자증권 본사)경영진이 (지점 상품)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사에서 지점으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기본 정책은 프라이빗뱅크(PB)에 대해서는 활동성, 고객만족도로만 평가한다"면서 "2019년 초부터 시행했고, 특정상품을 판매하거나 캠페인으로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나?"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재현(옵티머스대표), 정영제(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만난 적이 있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영채 대표를 만난 후 옵티머스펀드 판매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관련자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정영제는 지난 2019년 4월, 본인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상담을 요청하면서 만났는데 해당 상품이 우리 회사가 판매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이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폭탄돌리기의 마지막을 NH투자증권이 끌어안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판매력, 판매조건이 경쟁사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저위험·중위험 상품을 많이 팔았다. 해당 상품이 사기에 의한 상품이 아니었다면 고객과 잘 맞는 상품이었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사기에 의한 상품이었고, 판매사로서 고객에게나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로펌이 (채권 확인서에)날인해서 주면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라면서 해당 로펌에 옵티머스 사내이사를 맡다가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호의 법률적 사기행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1면 '한국판 뉴딜에 지역... '서 계속

공공기관 선도사업 지역특색 맞춰 진행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및 지능형 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다. 이어 중앙과 지방 정부가 매칭해 그린 스마트스쿨, 첨단 도로 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11개)와 기초자치단체(125개)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경기도의 경우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은 각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해 진행한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 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지역별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도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재정과 발행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하는 한편, 2021년부터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도 면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미지급 보험금 11兆 ↑... 유선확인 등 근본 대책 필요

대부분 우편·문자·이메일 등 통지

만기가 다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017년 8조 48억원에서 2018년 8조 8515억원, 2019년 10조 32억원, 2020년 8월 11조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 7246억원으로 전체 96.8%를 차지한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 2조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 5712억원), 동양생명(1조 5698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

는 삼성화재가 5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 4625억원, 롯데손보 3943억원 순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게 드문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 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 지급문제 관련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